

보도시점 2026. 9. 15.(화) 조간 배포 2026. 9. 14.(월) 09:00

기후금융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우리경제 탄소감축과 녹색전환을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 「기후금융 관계기관 TF」 제1차 회의 개최 -
- '26년 7월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기후금융 공급 규모는 42.0조원으로, 연간 목표의 74.1%를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
- 전환금융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할 예정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덕원, 이하 '금융위')는 9월 14일(월)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민간전문가, 은행연합회 등과 「기후금융 활성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전환금융의 안정적 도입과 시장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기후금융 활성화 TF」 제1차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9.14일 (월) 10: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등
(관계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간전문가) 이보미 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오형나 교수(경희대)
(업계) 은행연합회, KB지주, 신한지주
- (논의내용) 기후금융 주요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협업 강화방안 등

2. 주요 논의내용

< 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추진 실적 >

금융위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요 추진 실적과 지원 사례를 설명하였다. '26~'35년간 총 790조원 규모로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수립한 이후, '26.7월 기준 42.0조원을 공급하여 연간 목표의 74.1% 및 7월 누계 목표의 127%를 달성하였다.

< 기후분야 정책금융 공급현황 및 목표 >

(단위: 조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목표	~7월 목표	~7월 실적	~7월 달성률				
산은	19.7	11.5	14.9	129.2%	21.2	23.0	25.4	28.9
수은	13.8	8.1	12.0	149.6%	14.7	15.7	16.8	18.0
기은	4.3	2.5	3.0	119.1%	5.1	6.2	7.3	8.5
신보	13.0	7.6	7.8	102.8%	14.1	15.3	16.6	17.9
기보	5.9	3.4	4.3	126.0%	6.2	6.4	6.7	6.9
합계	56.7	33.1	42.0	127.0%	61.3	66.6	72.8	80.2

'26년 정책금융기관의 주요 기후금융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방식	규모	지원대상 내용
산은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A사	투자	200억원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수은	케이블 제조업 B사	대출	2,000억원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신보	자동차부품 제조업 C사	P-CBO 보증	70억원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기후금융 공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지원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과 실무 모범규준,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및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관련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할 예정이다.

< 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전환투자 지원사업 > (👉붙임1)

기후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 기업의 전환전략에 부합하는 녹색·전환투자를 대상으로, 정부 예산을 활용해 채권·대출의 이자비용 및 보증공급을 지원하는 '27년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다. 대규모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 이차보전 확대, 감축효과에 따른 녹색·전환대출 우대금리 차등 지원 등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민간의 자금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주요국(EU·싱가포르 등) 택소노미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기업이 K-택소노미 적합 매출액과 투자액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③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 추진현황 >

산업부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전자조립의 5개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2035 NDC 감축목표를 반영한 업종별 녹색전환 경로 마련을 위한 추진 계획을 공유하였다. 본 로드맵에 대해 산업계·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업종별 구체적인 로드맵 최종안을 수립·발표하여 전환금융의 공급기준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④ 전환금융 실무 TF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26.2월) 발표 후, 가이드라인의 실무 적용 지원을 위해 26.3월부터 금융권과 함께 운영중인 「전환금융 실무 TF」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실무 TF 운영을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조항별 세부 실무 기준 등을 보강하여 전환금융 취급을 위한 실무 모범규준(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금융권 현장 등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기업의 전환금융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산업부 마련예정)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⑥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사업 추진 현황 > (붙임2)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8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기후금융 취급 금융기관, 외부검토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 발굴부터 적합성 판단 및 사후관리까지 기후금융 취급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웹포털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심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향후 계획

금융위는 향후 「기후금융 관계기관 TF」를 운영하여 기후금융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권 등 현장 애로와 관계기관과 협업 필요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후속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와 전환금융의 연계 등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2-2100-2865)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78)
		담당자	사무관	이민선	(044-201-6690)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강은구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이석호	(044-203-4243)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책임자	과 장	예우영	(044-204-7444)
		담당자	사무관	이경규	(044-204-7438)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책임자	팀 장	황재학	(02-3145-8190)
		담당자	수석조사역	유희재	(02-3145-8191)
	신용정보원 기업금융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엄재철	(02-3705-5939)
		담당자	팀 장	김희태	(02-3705-5958)

사업명	사업개요	'26년 예산안	'27년 정부안	지원대상	추진절차
		6,204억원	7,373억원		
① 미래 환경산업 육성용자	환경산업 성장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용자 (일부 이차보전)	2,973억원	3,172억원	중소·중견 (환경)기업, 기후테크 기업 ^{신규} ※ 1.90~2.80%(26.3분기)	환경기업 여부, 온실가스 감축량 등 심사(예비승인, 기술원) ↓ 담보심사(승인) (금융기관) ↓ 용자 실시
②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위한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이차보전)	665억원	565억원	① 녹색경제활동 ②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국외사업 ③ 전환부문 ^{신설} ※ 우대금리 1.0~3.2% (정부 30~50%) ※ 기업당 2조원 한도	온실가스감축량 산정 ↓ 담보심사 및 대출실시 (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출 (기술원, 금융기관)
③ 녹색전환보증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용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지원 ※기후대응보증(금융위 중기부) + 녹색기술산업보증(신설) → 녹색전환보증(환경부)	1,500억원	1,714억원	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설비 등 투자기업 ②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경제활동 영위 기업	신용기술평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등 보증심사(보증기관)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금융기관)
④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하여 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지원	81억원	339억원	(‘26년) 0.2%p~1.0%p. 기업당 최대 3억원 → (‘27년) 최대 0.4%p, 기업당 최대 6억원	지원사업 공고(기술원) ↓ 참여기업 선정 ↓ 녹색채권 발행(기업) ↓ 지원금 지급(기술원)
⑤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이자비용 및 외부검토티비용 지원	164억원	253억원	중견기업(^{1차년도} 2%p, ^{2,3차년도} 1%p) 중소기업(^{1차년도} 3%p, ^{2,3차년도} 1.5%p) ※ 기업당 연간 3억원 한도 ※ 다년도(3년) 지원	지원사업 공고(기술원) ↓ 편입기업 선정 및 외부검토 ↓ 유동화증권 발행(신기보) ↓ 지원금지급(신기보)
⑥ 미래 환경산업 투자펀드	민관합동펀드 조성으로 미래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532억원	1,330억원	녹색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펀드 출자 ↓ 투자운용사 선정 ↓ 민간투자금 모집 ↓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반의 기후금융 (녹색+전환) 분야 시중 자금공급 활성화를 추진

* 제1차('25.09.19.), 제4차('26.2.25.)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21.12월 제정, '25.12월 개정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구성) 6대 환경목표, 2개 부문, 100개 경제활동 (녹색 부문 93개, 전환 부문 7개)
- (판단) 대상 경제활동이 4단계 적합성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 (활동기준 → 인정기준 → 배제기준 → 보호기준)

◆ (녹색금융) 자금사용 목적이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 기준에 부합

◆ (전환금융) 자금사용 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서 정한 경제활동에 해당되며, 활동기준 충족 및 일부 적합성 판단 기준을 미충족하나 5년 이내 또는 만기 중 충족 가능

-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해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이 필요 하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 존재

- 금융권 실무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류 체계로 K-택소노미 충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기업의 환경 기술 정보 확보가 어렵고, K-택소노미 판단 결과에 대한 그린워싱* 우려도 존재

* 실제로는 적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적합하다고 판단해 기후금융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이해도 제고와 여신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권 통합 인프라 확충 필요

2 추진 경과

- 금융회사의 원활한 기후금융 자금 공급·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 추진
 - 은행권 협의를 통해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금융 웹포털 단계적 구축
 - (협의체 운영) 워킹그룹('25년)* 및 실무협의체('26년)**를 통해 기후금융정보 집중 항목 및 기후금융 웹포털 운영 방향 등 협의
 - * 신정원(간사), 금감원, 은행연, 산은, 기은, 신보, 5대 금융지주(은행 포함)
 - ** 17개 은행 대상 기후금융 실무협의체 운영 중(1차:2.5., 2차:5.26., 3차:9.15. 예정)
 - (1차 시범서비스)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시스템, 기후금융 기업정보 서비스 제공('26.5월)
 - (관리규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녹색여신, 전환금융 관련 정보 집중·관리를 위한 '기후금융정보관리규약' 제정('26.6월)
 - (2차 정식서비스) 녹색기업 추천, 적합성 판단 신청·결과 중개 서비스 등 제공('26.8월)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안)】



기업발굴,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업무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3 세부 내용

1 기후금융 웹포털 서비스 (1차 '26.5.14., 2차 '26.8.25.)

- 기후금융 취급 금융기관, 외부검토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①지원 기업 발굴부터 ②적합성 판단 및 ③사후관리까지 기후금융 취급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한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① 지원 기업 발굴

- (기후금융 기업정보) 업무협약 체결* 및 공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환경·기술 인증 정보(총 36종)** 제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25.9월), 한국에너지공단('25.11월)

**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전문기업 등 녹색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 인증
제품, 에너지효율등급, KS제품 인증 등

- (기후금융 기업 추천) 기후금융 기업정보와 금융기관이 취급한 일반
기업여신 차주를 매핑하여 기후금융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자 및
해당 녹색경제활동 추천

② 적합성 판단 지원

- (판단 시스템) 자금 신청 기업의 업종 및 키워드와 매칭되는 녹색
경제활동을 추천*하고, 인정·배제·보호기준 충족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선택·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 100대 경제활동을 세분화하여 관련 업종(KSIC) 및 키워드와 매핑한 DB를 구축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의 정확도, 검색위치, 비중별 점수를 합산한 추천 로직 구현

- (판단 중개) 외부검토기관을 통한 적합성 판단 필요시 금융기관-외부
검토기관 간 적합성 판단 신청 및 결과 전송을 중개하는 시스템 제공

③ 사후관리 지원

- 기후금융 취급 이후 자금의 녹색여신·전환금융 기준 충족 여부 점검에
필요한 인정·배제·보호기준 가이드 및 사후관리 정보 등록·집중 기능 제공

2 기후금융정보 집중관리 체계 기반 마련 ('26.6.25.)

- 기후금융 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 정책 지원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기후금융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관리규약) 녹색여신, 전환금융 등 기후금융정보*를 계좌 단위로 집중하기 위한 관리규약 마련('26.6.25. 제정, '27.1.4. 시행 예정)
 - * 기후금융 유형, 기후금융 판단정보(기준 충족 여부), 사후관리 정보 등

4 향후 계획

1 기후금융 웹포털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기관 확대

- 금융기관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K-택소노미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전환금융 모범규준 지원을 위한 기능개선 등 웹포털 기능 고도화
 - * 이용자가 키워드 입력 시 매칭 가능성이 높은 경제활동을 추천
- 은행 외에도 기후금융 취급 업권*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 *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2 집중관리 개시 및 통계정보 제공

- 은행권 대상으로 기후금융 지침에 따라 취급한 기후금융 실적 및 K-택소노미 판단정보의 집중 개시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금융 웹포털 내 통계정보(기후금융 잔액, 산업별·기업규모별 현황 등) 제공 예정

【통계정보 제공(안)】

